

재유행에 격리·마스크 무기한 유지

입국 후 PCR 검사 3일 이내→1일 이내 단축 유행 확산 땀 입국 전 PCR 검사 결과만 인정

코로나19의 빠른 재유행 속도를 고려해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무기한 유지한다. 먹는 치료제 공급과 처방 확대를 위해 물량을 추가 구매하고 재택 치료자의 집중·일반 관리 체계를 폐지한다. 재유행으로 위기가 예상될 경우 중증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 뒤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해 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만266명으로 63일 만에 4만 명대로 올라섰다.

정부에 따르면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유행 속도가 증가하고 격리 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하더라도 잔존 감염률이 15.4%에서 32.1%로 상승한다.

정부가 지난 6월 마련한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보면 핵심 지표인 사망자 수와 치명률은 모두 조건을 달성했다. 단 보조 지표인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유행, 의료 체계 대응 역량 등은 모두 미달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배출 시기를 고려해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의했다. 당초 4주 단위로 격리 의무 해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기준 방침도 철회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유지한다.

신속한 진단 검사를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 체계도 유지하며 유행이 더 확산하면 임시 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유전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은

“임시선별검사소 확대에 대해 지자체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병원체를 감시하는 1차 의료기관은 77개소, 2·3차 의료기관은 28개소로 확대하고 BA.5 등 변이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고도화한다.

해의 유입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후 3일 이내 실시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오는 25일부터 1일 이내로 강화하고 음성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현재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설치한 코로나19 검사 센터는 7월 중 제주공항에도 설치하고 향후 유행 상황에 따라 다른 지방 공항에도 확대한다.

유행이 지속 확산할 경우 현재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를 인정했으나 PCR 검사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공급과 처방도 확대한다.

팍스로비드의 처방 효과를 보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중증화 위험도 63%, 사망 위험도 56%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국내 요양병원의 80%, 요양시설의 29%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어, 공급과 처방을 활성화하면 추가 중증·사망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먹는 치료제는 지난 8일 기준 106만2000명분이 도입됐으며 28만4000명분을 사용했고 77만8000명분이 남았다.

정부는 유행 확산에 대비해 94만 2000명분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확진자가 20만명이 발생하면 월 치료제 16만명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돼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먹는 치료제는 기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확진자에게 투약을 우선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고위험군이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 권고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원내 처방을 한다. 현재 먹는 치료제를 담당하는 약국은 전국에 993개소다.

요양병원·시설에는 전국 258개 보건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신속 공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환자정보시스템에 처방 대상 정보 입력 항목을 축소해 처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미국 제약사 ‘베루’의 중증 먹는 치료제 ‘사비자블린’과 같이 신규 치료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가 구매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비해 의료 대응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코로나19 병상으로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4만6000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단 20만명 유행을 가정하면 중환자실 435개 병상, 준-중환자실 970개 병상 등 1405개 병상의 재가동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이날 중 중증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가동 준비 실태와 인력, 장비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 말 코로나19 전담 병상 지정 목록을 마련해 유사 시 재가동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중소 병원 중심인 거점병원 병상 수는 일부 조정해 위중증 치료 역량이 높은 3차 의료기관 병상을 확보하고, 전국 7개 권역에서 병상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환자 등 특수 치료를 위해 투석 치료제 기준 수가 대비 200%, 분만 치료에 기준 수가 대비 300%의 가산 수가를 지급해 병상 등 인프라를 확보한다. 응급실 병상 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반 격리실과 코호트 격리 구역 등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소아 병상의 경우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지금은 병상 배정반을 통해 분만·투석·소아 병상 입원 조치를 해결하고 있지

만 앞으로 확진자가 많아지면 지역별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해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 인력은 과전 신청자 1만명이 대기 중으로,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업으로 교육 중인 간호사 430명은 개인별 2~6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고 과전 인력의 기간 종료 후 의료기관에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자체 채용을 유도한다.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도 재유행 시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각 시도별로 즉시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21개 예비시설도 준비해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을 경우 국소 유행 지역은 생활치료센터를 열도록 하고, 20만명을 넘을 경우 병상 가동률과 입소 수요 등을 고려해 가동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재택치료 대상자를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던 체계는 8월부터 폐지한다. 이에 따라 모든 재택치료 대상자는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고 필요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엔 지침 변경이 없으나 향후 20만명 이상 재유행이 발생하면 선제 검사 주기 단축, 대면 면회 및 외출·외박 제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확진자가 급증하면 전담요양병원, 전담정신병원을 신속하게 재지정해 의료 대응을 강화한다.

박항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만 명대에서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 주 1회 RAT 병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만명이 됐을 때 주 2회 PCR 검사, 주 2회 RAT도 필요 시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질병청과 협의 통해 횡수 조정은 있을 것도 같다”고 말했다.

백정란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의 집중 관리로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물에 잠긴 산책로에 발걸음 돌리는 시민 강한 장맛비가 내린 13일 오전 서울 은평구 불광천에서 시민이 물에 잠긴 산책로를 확인한 후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여수 해상서 어선 간 충돌...추락 선원 7명 구조

여수해경, 침몰 방지·해상 오염 예방 작업

여수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했으나 바다로 추락한 선원 7명이 모두 무사 구조됐다.

1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8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남동쪽 약 17km 해상에서 4급 새우조망 어선 A호가 30급 근해장어통발 어선 B호와 충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A호 승선원 7명이 바다

에 빠졌으나, 곧바로 B호 선원들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 3명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주변 바다에는 선박 기름 유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 200m, 길이 150m 규모의 얇은 유막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구조대를 급파, 전복 선박에 부력 장치(리프트백)를 설치해 침몰 방지 조

치를 마쳤다.

또 해양 오염을 막고자 선체 내 연료 계통을 봉쇄했으며 필요하다면 방제 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사고 직후 두 어선 선장은 음주 운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양방 작업 도중, 어선 B호가 선체 중앙을 들이받았다’는 A호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폭염 속 13개월 아이 차량 갇혀...“차에서 내릴 때 내부 확인해야”

생후 13개월 된 아이가 폭염 속 승용차 안에 갇혀 사고가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전북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45분께 익산시 삼기면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13개월 된 아이가 갇혀있다”는 부모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승용차 열쇠가 차 안에 있는 상태로 문이 잠겨 아이는 15분간 갇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이는 체온이 37.8도까지 올랐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섭 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여름철 30도가 웃도는 날씨에 차량에 갇혀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차량 내부 온도는 최대 90도 이상까지 오르고 어린이의 경우 체온 상승 속도가 성인보다 3~5배 빨라 심장마비와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경우 인원수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만약 아이가 차 안에 갇혔을 경우 손이나 엉덩이로 경적을 누르는 방법 등을 사전에 교육해 두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환기자



해양경찰교육원, ‘깨끗한 바다 만들기’ 상반기 봉사활동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이 신임경찰관을 대상으로 펼쳤던 상반기 ‘깨끗한 바다 만들기, 연안 정화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최이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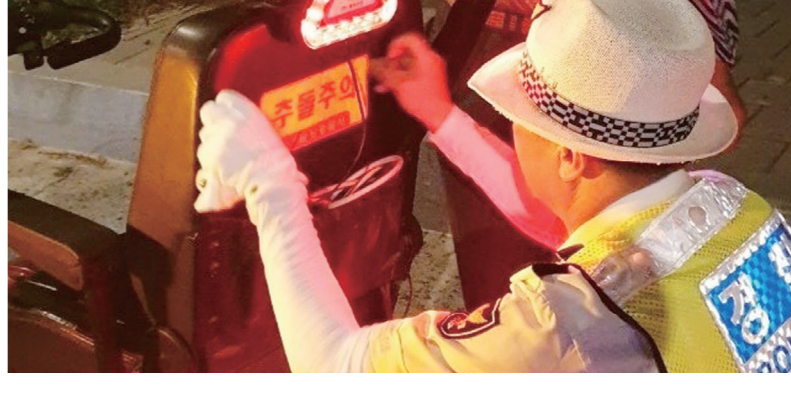
광양소방, 동부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7일 광양시 동부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광주 남부소방, 여름철 정전 대비 ‘승강기 사고 특별구조훈련’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여름철 정전 등으로 인한 승강기 사고를 대비해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12일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담양경찰, 전동기자차 교통사고예방 현장 홍보활동
담양경찰서는 전동기자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반사지 부착 등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무안경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 계도·단속
무안경찰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경찰, 가정폭력 위기 가정 통합솔루션 회의 개최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지난 12일 문화마루에서 가정폭력 위기가정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개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